

학연·지연·혈연... '그들만의 리그'로 꿈아가는 직장

실패의 경제

렌트시킹과 집단이기

(지대추구)

(11) 직장에도 연고주의

#국내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A씨(34세)는 3년전 입사한 신입사원 B씨의 모습을 보고 허탈감을 느꼈다.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임원 라인'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뒤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B씨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직장 상사들의 지적에도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와 업무 태만 등 사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B씨는 입사 후 3년이 흐른 뒤 자신의 적성에 맞지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A씨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피땀을 흘려가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낙하산으로 들어와 피해를 끼치고 적성에 안맞다고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허탈했다"며 "우리 의식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혈연·지연·학연으로 엮인 고질적인 연줄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채용비리 근



국내기업 각종 채용비리 만연

중앙·지방·유관 공공기관 점검

1190곳 중 946곳 비리 연루돼

공정한 기회 잃은 취업생 분통

절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부랴부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으로 오랜기간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악습, 부패와 비리 등을 단절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강원랜드, 수서고속철도(SRT)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데 이어 4대 시중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중앙·지방·유관 공공기관 1190개를 점검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946개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 공공기관은 93%가 채용비리로 얼룩졌다. 정부는 총 83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지만 불법채용의 고리는 쉽게 끊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해마다 대규모로 채용을 시작하는 3월과 9월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 인력이 밀려들어온다. 이들은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분류된다. 1차 서류전형 우대를 해주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학

점·영어·면접 점수 등 취업 스펙을 키우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취업준비생과 달리 지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상 합격한 것과 다름없다. 즉 내정자 상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의 일부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청탁 관행으로 적폐 중의 적폐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사회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된다.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 취업생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요즘, 일부 권력자의 힘을 악용해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사연처럼 부정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원들 중 대다수가 중도 퇴직한다. 더 대우가 좋은 기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등이다. 연줄 없이 실력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수십 명은 취업의 기회를 잃고 좌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학연이나 졸타기 등을 중요시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철저히 배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인맥이 없는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C씨는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업무를 하면서 삼수 끝에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평소 친했던 정규직 직원들은 채용 시점만 되면 '00라인이던데 잘할 수 있겠어?'라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 정규직들은 '자신만의 리그'를 만들어 배척하고 있다는게 C씨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아내고 기회와 공정, 정의라는 나무가 자라는 세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게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지원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면접으로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건 쉽지 않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으로도 감사를 확대해 채용비리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metroseoul.co.kr



모바일 직불서비스 시연 영상 중 일부.

/NH협업은행

은행 예금계좌서 바로 결제 '모바일 직불서비스' 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기술표준·플랫폼 구축

내년 상반기 중 은행 계좌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도입된다. 주로 신용카드에 편중된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구조를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바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결제 방식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금추위)는 고객의 은행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추위는 금융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등 28곳으로 구성된 금융권 협의체로, 의장은 한국은행 윤연식 부총재가 맡고 있다.

이번 서비스 추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급서비스 채널이 모바일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

재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은 신용카드 서비스의 선점으로 현금카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일평균 3억3000만건,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9000억원으로 국내 민간소비의 75.4%가 신용카드로 이뤄졌다. 반면 현금카드 이용실적은 1억6000만건, 이용금액 11억1000만원으로 신용카드 전체 규모의 0.05%에 불과했다.

같은 직불형태로 분리되는 체크카드의 이용건수가 2억건, 이용금액이 400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금카드는 사실상 이용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직불형태의 이용실적 대부분(99%)은 체크카드다.

이렇다보니 지급서비스시장의 고비용 구조는 고착화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외에 고객 신용평가, 연체 시 대손처리, 카드대출전표 관리 등의 업무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네트워크 업무를 VAN사가 대행하는 시스템이어서 수수료 등의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되는 문제점도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자산 120억 미만 회사 '외부감사' 제외

금융위, 외부감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 경영부담 고려 자산 기준 조정

외부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서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한회사 기준도 차별화된다.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된다.

대규모 회사 기준 또한 새롭게 신설했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입법예고	100억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대안	120억 미만		상동	

*현행 0 기준에 따른 외감대상 주식회사 수:28,900개사 (2016년 말 기준)

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부합하는 회사가 약 2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규정 완화를 통해 전체 외감대상이 2016년 기준 현재보다 0.1%(300여곳)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9월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도 예고한다.

변경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는 요건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등록요건은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사무소와 부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시행은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도에 힘쓰게 하려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회사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면 강도 높은 감리를 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LH, 국내 최초 1140억 규모 소셜본드 발행

세계 최초 스위스프랑 발행 5년 만기, 해외 투자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소셜본드를 발행했다. 스위스프랑으로 발행된 소셜본드로는 세계 최초다.

31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소셜본드의 규모는 1억 스위스프랑으로 한화로는 약 1140억원 상당이다.

소셜본드는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해외채권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LH는 국내 시중은행과 발행대금인 스위스프랑을 1% 후반 금리로 원화와 통화스왑해 동일 5년 만기 국고채(7월24일 기준 2.34%)보다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김정일 LH 자금지원부장은 "소셜·그

린본드 발행 대부분이 미국달러나 유로화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미국금리 상승으로 스위스프랑이 금리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며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스위스프랑으로 발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번 소셜본드로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임대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4분기에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소셜본드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